

## 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Right to Health News at a Glance

2014년 7월 1주차(2014.6.20-7.3)

### 요약(Summary)

#### ○ 주요뉴스

1. 병원 노동조합, 의료민영화저지 파업(6/24, 27)
2. 국회 입법조사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 위법"(7/2)
3. 병원계 하투 돌입...이달 22일 '2차 총파업'(7/2)
4. 보건복지부, 국회 업무보고(7/3)

#### ○ 국내정책

- 野, '영리자회사 설립금지법' 잇따라 제출(6/26)
- 복지부, 지방의료원 공익적 기능 강화·경영개선 추진(7/3)

#### ○ 의료산업

- 이대목동병원, 4개월간 엑스레이 좌우 바뀐 줄 모른 채 수백명 처방(6/23)
- 경제계 또 영리병원 허용 주장...“일자리창출 위해 필요”(6/25)
- 이대목동병원, 4개월간 엑스레이 좌우 바뀐 줄 모른 채 수백명 처방(6/30)
- 서울대병원, '헬스커넥트' 위법성 논란(7/2)

#### ○ 약계뉴스

- 약사가 복약지도 안하고 약 팔면 과태료 30만원(7/1)

#### ○ 관련단체 동향

- 상급병실료 보전책, 특수병상 수가인상폭 '조율 중'(6/25)
- 의·병협 회장 첫 상견례, 의료제도 개선 노력 약속(6/29)
- 의협, 비대위 중심으로 원격진료·영리자회사 저지 본격화(6/30)

#### ○ 기타뉴스

- 김용익의원, 보건의료노조 설문조사, 응답자 70% "의료영리화 반대"(6/23)
- 후반기 복지위 20명으로 출범...여야 간사의원 교체(6/24)
-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 “문형표 장관 고발”(6/25)
- OECD health data 2014 발표(7/2)

## 1. 병원 노동조합, 의료민영화저지 파업(6/24, 27)

경북대병원 노조가 의료 민영화에 반대해 27일 하루 파업에 들어갔다. 경북대병원 노조원 100여명은 이날 파업을 선언한 뒤 서울에서 열리는 기자회견과 문화제에 참가하기 위해 상경했다. 이들 파업 참가자는 필수인력을 제외한 간호사, 의료기사 등으로 경북대병원 전체 노조원 가운데 약 10%이다.

경북대병원 측은 “파업에는 비번인 직원이나 휴가자 등 일부만 참가하므로 응급실, 수술실을 비롯한 병원 전체가 차질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벌이는 파업에는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 노조가 참여했다.<sup>1)</sup>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유지현, 보건의료노조)도 ‘의료민영화 저지’ 등을 내걸고 24일 경고 파업에 돌입했다. 범 노동, 시민사회, 보건의료계 등은 일제히 보건의료노조 파업 지지를 선언하고 나섰다. 산별 중앙교섭 및 현장교섭이 결렬 돼 쟁의권을 확보한 보건의료노조 소속 사업장들은 이 날 일제히 병원 로비에서 파업출정식을 진행한 뒤 경고파업에 돌입했다. 파업 출정식 후에는 서울로 상경해 도심 집회를 개최했다.

전국에서 모인 약 5천 여 명의 조합원들은 오후 2시부터 서울역 광장에서 ‘의료민영화 저지! 공공의료기관 정상화 대책 폐기! 진주의료원 재개원! 국민건강권 수호!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sup>2)</sup>

## 2. 국회 입법조사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 위법"(7/2)

숙박·국제회의업 등 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의료법 개정 없이 확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해석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2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이 의료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를 국회 입법조사처에 문의한 결과, 4명 중 3명이 다수의견으로 “숙박업·여행업·국제회의업 등은 위임 규정 이탈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부대사업 확대를 추진하는 복지부는 의료법 49조에 ‘환자 또는 의료 종사자의 편의를 위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는 위임 조항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입법조사처는 위임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김보라미 법무법인 ‘나눔’ 변호사는 “부대사업의 핵심은 의료기관이 본래적으로 수행하는 의료업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비영리 활동 범위의 사업임을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숙박업, 여행업, 국제회의업, 건물임대업 등은 본래적 의료업의 범위를 뛰어 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목욕장업, 장애인보장구 등은 환자 또는 의료 종사자가 일상적 활동을 영위하는데 필요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여행업, 국제회의업, 외국인환자유치, 종합시설업,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변호사 7씨는 “개정안에서

확대된 부대사업의 다수는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나, 숙박업, 여행업, 국제회의업 등은 의료법 개정을 통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변호사 L씨만이 “의료법에 따라 구체화 한 것은 의료환경 변화 등에 대응해 탄력적으로 규정해도 무방하다. 시행규칙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고 했다.<sup>3)</sup>

### 3. 병원계 하루 돌입...이달 22일 '2차 총파업'(7/2)

지난 6월 24일 의료영리화 반대 총파업을 벌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이 22일 2차 총파업에 돌입한다. 보건의료노조는 최근 ‘전국 중집·지부장·전임자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22일 2차 총파업 총력투쟁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노조는 7일 회의를 통해 2차총파업에 대한 세부논의를 진행하는 한편, 9일과 16일 각각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건물 앞에서 ‘의료민영화 저지 및 공공의료기관 가짜 정상화 폐기 결의 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보건의료노조 지도부는 2차 총파업을 위해 7일부터 파업 전날인 21일까지 전국 지부를 도는 ‘산별총파업 조직을 위한 전국 현장순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지역본부별 조합원을 비롯해 범국민적인 의료민영화 반대 목소리를 총파업에 담겠다는 것이 보건의료노조의 방침이다.<sup>4)</sup>

### 4. 보건복지부, 국회 업무보고(7/3)

보건복지부가 부대사업 확대, 자법인 설립 등 박근혜 정부의 의료규제 완화 정책 시기를 확정했다. 이는 관련단체와의 의견조율을 마쳤음을 시사하는 것과 동시에 거센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본격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분석이다.

복지부가 2일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부대사업 확대, 영리자법인 설립, 원격의료 시범사업 등의 추진 시기를 각각 확정했다. 부대사업 범위 확대를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경우, 7월 22일 입법예고가 끝나는대로 국민의견 수렴해 8월 시행할 계획이다. 학교법인 등과의 불형평성과 자금조달 제약 등의 문제를 개선 하고자 추진되는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 역시 금년 중 설립사례가 창출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답보 상태였던 원격의료 역시 시범사업 지역·환자 선정 및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해 조기 착수, 11월 말 완료를 목표로 한다. 복지부는 기존 의사-의료인 간 시범사업을 활용, 기술적 안전성에 대한 검증과 원격모니터링 등 가능한 부분부터 우선 실시한다는 계획이다.<sup>5)</sup>

이에 올해 복지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거대 담론인 의료영리화 논란을 촉발한 의료법시행규칙 개정과 관련 야당 측 의원들은 복지부에 십자포화를 쏟아냈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확대하도록 한 시행규칙 개정이 입법조사처 법률 자문 결과 위임입법을 일탈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이 의료법상 위임입법을 일탈했는지 여부에 대해 4명 중 3명의 자문위원이 숙박업, 여행업, 국제회의업 등 부대사업이 의료법상 위임규정을 일탈했다는 답변을, 1명의 자문위원은 부대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60조 개정

만으로 가능하다고 답했다"면서 "다수설과 소수설이 있으면 어느 편에 기초해서 행정행위를 하는게 일반적이나"고 질타했다. 이에 문형표 장관은 "우리가 내부검토했을 때는 그 반대로 나왔다"면서 "그때는 다수가 위임입법을 일탈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상법에 적용받는 주식회사인 영리자법에 대한 모법인인 의료기관이 경영권을 상실할 경우 사실상 복지부의 직접적인 통제권에서 벗어나게 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이에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상법상은 어렵지만 의료기관에 대한 감독권은 시도지사와 복지부에 있어 그것을 중 지하도록 하고 자산처분 명령, 주식매각 명령, 법인 취소 절차를 갈 수 있다"면서 "상법보다 위에서 트리트먼트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같은 지적이 연달아 이어지자 문 장관은 "현재 입법 예고기간으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재조정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sup>6)</sup>

## 국내 정책

### 1. 野, '영리자회사 설립금지법' 잇따라 제출(6/26)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이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을 금지하도록 한 입법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다. 26일 새정치연합 최동익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실상 정부의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과 가이드라인 등 영리자회사 허용 추진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김용익 의원에 이어 두번째다.

최 의원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의료법인과 민법, 특별법 등에 의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비영리법인들이 별도의 영리회사 설립 등을 통해 다양한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의료업무와 관련된 영리사업의 종류와 내용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했으며,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의료기기 분야 또는 제약분야 등 의료업무와 관련된 영리사업을 위해 상법상 회사를 설립하거나 투자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가 어느 하나 이상의 사업을 하는 경우 상법상 회사를 설립해 운영해서는 안되도록 했다.<sup>7)</sup>

### 2. 복지부, 지방의료원 공익적 기능 강화·경영개선 추진(7/3)

보건복지부가 앞으로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손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일반적 적자는 개별 지방의료원이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경영개선을 통해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방의료원 스스로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지원책을 마련, 지방의료원별 자구노력에 대한 평가와 차등 지원을 통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2일 지자체 담당 국장과 지방의료원장을 대상으로 ‘지방의료원 공익적 기능 강화 및 경영개선’ 계획을 논의하고 자체 계획 수립 등의 실행을 위한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복지부가 공개한 ‘지방의료원 공익적 비용 계측’ 연구용역 실시결과에 따르면 2012년 33개 지방의료원 전체 손실액 1326억원 중 61%에 해당하는 812억원이 공익적 역할 수행에 따른 ‘건강한 적자’, 39%인 514억원은 경영개선을 통해 감소 가능한 ‘불건강한 적자’로 구분됐다. 또 2012년 532억원이었던 운영보조금을 감안하면 보조 후 ‘건강한 적자’는 140억원~280억원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복지부는 지방의료원별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료원이 소재한 지역 특성을 반영, 요구도가 큰 필수요료를 중심으로 기능을 강화하고 재정적·정책적 지원체계도 이를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지자체와 지방의료원은 수익·비용과 관련된 모든 운영체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연도별 목표치를 설정하고 의료원별 자구노력을 포함한 ‘경영개선계획(2015~2017)’을 수립해야 한다.

복지부는 지방의료원 운영 관련 주요 지표 등 기초 자료와 계획 수립에 참고할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이다.<sup>8)</sup>

## 의료 산업

### 1. 이대목동병원, 4개월간 엑스레이 좌우 바뀐 줄 모른 채 수백명 처방(6/23)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012년에 구축한 표본코호트DB의 자료로서 완성도를 높여 오는 25일부터 공고기간을 거친 후 일반 연구자에게 학술연구용으로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표본코호트DB는 2002년을 기준으로 전 국민의 2%인 약 100만 명을 표본 추출해 2010년까지 동일 대상자에 대해 거주지, 사망년월, 사망사유 등 사회·경제적 변수가 포함된 자격자료, 진료내역 및 건강검진자료를 9년간 연결한 코호트 자료이다. 이 자료는 장기간 관찰이 가능해 시간적 선후관계나 인과적 관계 분석이 가능하다.

건보공단은 이 자료가 국민의 민감한 건강정보임을 감안해 우선적으로 정책 및 학술 연구과제에 한해 공단 내부 ‘연구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소한의 수수료를 받고 제공할 예정이다.

김종대 이사장은 “이번 표본코호트DB 공개는 지금까지 제한적으로 활용됐던 건강보험자료의 연구적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보건·의료를 포함한 경제, 자연, 사회, 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sup>9)</sup>

### 2. 경제계 또 영리병원 허용 주장...“일자리창출 위해 필요”(6/25)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을 놓고 의료민영화 논란이 거센 가운데 경제계가 국내 내수활수와 일자리창출을 위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또다시 제기했

다. 영리병원 설립을 통해 의료관광산업을 활성화 시켜야 새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25일 발표한 '내수활성화를 위한 10대과제 제언'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대한상의는 이 보고서에서 내수활성화를 10대 과제로 ▲'일자리창출형 규제개혁', '급격한 기업부담증가의 속도조절' 등 투자활성화 과제(4건) ▲'요우커(遊客·중국인 관광객) 10% 유치 등 그리스 수준 관광산업 육성' 등 서비스활성화 과제(4건) ▲'20만 빈 일자리 채우기', '기업소비 진작' 등 경제계 실천과제(2건) 등을 제안했다. 특히 일자리창출형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영리병원 설립 허용을 지목했다.

대한상의는 보고서에서 "의료산업의 경우 세계 최고의 의료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일자리창출 효과도 크지만 각종 투자규제로 발이 묶여있는 상황"이라며 "미국, 싱가포르, 태국처럼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을 허용해 의료관광객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간 의료관광객수는 15만명으로 태국(156만명)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중국인 관광객인 '요우커'를 10%만 유치해도 그리스 수준의 관광국가가 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내다봤다.

'자격증' 장벽으로 막혀있는 의료 등 전문서비스 분야의 진입규제도 대폭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고용의 보고인 지식서비스산업을 키워야 한다"며 "세계보건기구(WHO)도 인정한 척추교정치료(카이로프랙틱) 자격증을 국내에서도 합법화해 대체의료 부문의 일자리를 늘리고, 영국·독일처럼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간 칸막이 규제도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sup>10)</sup>

### 3. 이대목동병원, 4개월간 엑스레이 좌우 바뀐 줄 모른 채 수백명 처방(6/30)

서울의 한 대학병원이 엑스레이(X-ray) 필름 좌우가 바뀐 사실을 녀 달 동안 모른 채 환자 수백명을 진단·처방해놓고도 쉬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화여대부속목동병원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4월말까지 이비인후과·소아과·내과·가정의학과 등 4개 진료과로 내원한 환자 578명의 좌우가 바뀐 얼굴 엑스레이 필름 영상을 근거로 진단·처방을 내렸다. 방사선사 A씨가 환자들의 코 엑스레이 필름 영상을 병원 전산시스템에 잘못 입력했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약 처방을 받은 환자 578명 중 123명은 한쪽 코에만 축농증 의심 소견을 보인 환자였다. 왼쪽 코가 불편해 병원을 찾은 환자가 엉뚱하게 오른쪽 코를 진료받은 셈이었다. 특히 이들 중 23명은 소아환자였다. 나머지 455명은 코 질환이 없거나 양쪽 코에 모두 문제가 있는 환자였다.

그러나 방사선실을 관할하는 영상의학과는 의료 과실을 4개월 후에도 확인했고, 실수를 저지른 방사선사 A씨와 방사선실장에게 시말서를 받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환자들은 물론 병원 측과 보건복지부 등 감독기관에도 4개월간 진단을 거꾸로 내린 사실에 대해선 보고하지 않았다.

이대목동병원 측은 지난 27일야 뒤늦게 오진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관계자는 "코 엑스레이 필름 영상을 전송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 말도 안 되는 실수였다"면서도 "약 처방이 환자한테 위해가 없어 굳이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sup>11)</sup>

#### 4. 서울대병원, '헬스커넥트' 위법성 논란(7/2)

서울대병원의 자회사 성립 및 부대사업 확대가 현행법에 위배된다는 해석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은 최근 “서울대학교병원 및 국립대학병원이 자회사 등을 설립하거나 투자를 통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국회입법조사처에 질의한 결과 이와 같이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대병원 노조는 “서울대병원이 투자하고 있는 헬스커넥트는 원격진료, 건강관리서비스 의료민영화 사업을 하는 회사라는 점에서 국립대병원이 출자해서는 안되며 서울대병원 환자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대병원 측은 “자회사인 헬스커넥트와 서울대병원은 지난 2011년 정부의 사업 인정을 받았고 특수법인으로 자회사 설립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유 의원의 ‘서울대병원과 국립대병원의 자회사 또는 투자 통한 수익사업이 가능한가’에 대한 질의에 입법조사처는 법무법인들의 의견조회를 통해 현행법 위반은 아니지만 법률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A법무법인은 “서울대병원과 국립대병원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의료법’ 제49조에 따른 부대사업 제한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자회사를 설립해 부대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자회사에 외부자본이 투입될 경우에는 현행 ‘의료법’의 비영리성 취지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어 법률개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B법무법인은 의료법인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 ‘의료법’제49조의 취지에 비춰 대학병원들에 대해서도 ‘의료법’ 제49조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사업 외의 사업을 수행할 자회사 설립을 허용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서울대병원이 부대사업을 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지만 서울대병원이 갖는 비영리성에 위배된다는 내용이 뒤를 이었다. C법무법인은 “서울대병원 이사장이 서울대학교 총장인 점, 교육부장관의 이사 임명권 및 행정각료가 당연직 이사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서울대병원은 공공성을 띠는 의료법인이므로 비영리법인으로서의 서울대병원이 영리성을 가지는 자회사를 설립하여 수익활동을 하는 것은 서울대병원 설치법의 입법목적에 위배됐다”고 판단했다.<sup>12)</sup>

## 약계 뉴스

#### 1. 약사가 복약지도 안하고 약 팔면 과태료 30만원(7/1)

앞으로는 약사가 환자에게 의약품의 명칭이나 사용법, 효과,부작용 등의 복약지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3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같은 내용을 포함한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사가 복약지도를 하지 않거나 약국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약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비슷한 상호를 내 건 경우 3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의사와 달리 약사·한약사에게만 적용돼온 위생 복명찰 의무 착용 조항이 폐지 됐다.

또한 의약품 도매상의 창고 최소 면적을 264㎡로 규정하고 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의 처분 기준에 대한 항목은 추가됐다.

제약사가 사례 보고서를 받을 때 사례비 지급이 가능한 보고서 수를 늘릴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현재 제약사는 신약을 출시한 뒤 재심사에 필요한 3000건의 사례 보고서를 의료인에게 받아 식품의약품 안전처에 제출해야하게 돼있다. 지금까지는 리베이트를 우려해 이 보고서에 대한 사례비를 3000건에 한해 건당 5만원으로 제한해 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제약사들이 해외 진출 및 허가, 연구 등의 목적으로 보고서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더 많은 보고서에 대해서도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게 됐다.<sup>13)</sup>

## 관련단체 동향

### 1. 상급병실료 보전책, 특수병상 수가인상폭 '조율 중'(6/25)

24일 대한병원협회는 보건복지부와 비급여제도 개편 회의를 갖고 상급병실료 개편에 따른 손실보전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손실보전방안으로 제시된 특수병상수가 인상폭을 두고 중점적으로 이야기가 오갔다.

현재 정부는 중환자실, 격리치료실, 무균치료실, 납차폐 특수치료실, 신생아실 등 5종을 대상으로 평균 50%를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은 5종 모두 해당되며, 종합병원은 격리치료실과 신생아실만이다.

하지만 병원계는 종별 차등없이 동일하게 인상적용할 것과 상급종병의 경우 무균치료실 및 납차폐 특수치료실의 경우 100% 인상을 요청 중이다. 중환자실은 70% 인상을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인상 대상인 5종 이외에 분만실도 수가가 신설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했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상급병실료 개편과 관련해서 복지부와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였다"면서 "병원계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음으로 다음번 회의에선 병원계가 요구하는 인상폭을 적용한 데이터를 가지고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 1차 손실보전방안인 기본입원료 인상만 적용시 약 36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2차 손실보전방안인 특수병상수가가 인상될 경우 145억원의 추가보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병원계 요구안을 토대로 관련 학회와의 논의를 거치는 등 폭넓게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다음 회의는 7월 4일 열리는 건정심 이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sup>14)</sup>



## 2. 의·병협 회장 첫 상견례, 의료제도 개선 노력 약속(6/29)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과 대한병원협회 박상근 회장이 처음으로 만났다. 추 회장은 의협회장 취임 이후 병협회관을 방문했다.

박상근 병협회장은 "건강보험 수가결정구조와 같이 의료현안이 산적하다"며 "의병협이 단합된 모습이 보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추 회장은 공감대를 표하며, 공통 현안에 대해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sup>15)</sup>

## 3. 의협, 비대위 중심으로 원격진료·영리자회사 저지 본격화(6/30)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집행부가 의료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와 손을 맞잡았다. 이에 따라 의협 내부에서 '원격진료와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저지'를 위한 단일 전선이 형성된 셈이며, 대내외적으로 비대위의 위상이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지난 28일 열린 비대위 제4차 회의에 변영우 대의원 의장과 함께 고문 자격으로 참석, 앞으로 이철호 부회장을 비대위에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에 집행부를 파견하지 않고 버틴 노환규 전 회장과 다른 노선을 걷겠다는 의지 표현으로 이해된다.

대정부 협상을 위한 협상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협상위원회 수석은 조인성 경기도의사회장이 맡았으며, 협상팀의 구성은 의협 집행부 파견 비대위원이 확정된 후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협상위 구성은 대정부 협상팀이 비대위로 일원화된다는 의미로 해석돼 주목된다.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허용에 대해서도 입장을 확실히 했다. 비대위는 정부의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허용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대하는 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공교롭게도 이날 회의에 병원협회 파견 비대위원 2명은 불참했다. 비대위는 영리자회사 문제와 관련해 복지부 측에 의정합의에 명시된 논의기구 설립 약속 이행을 요구하기로 했다.

원격진료 관련 대화원 설문조사 방안도 주요 의제로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대화원 설문조사를 시행하기 전에 제2차 전국규모 반 모임 개최를 추진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이밖에 제2차 의정합의 아젠다 가운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항목과 관련, 대한전공의협의회 수련환경개선 TFT와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sup>16)</sup>

## 기타 뉴스

### 1. 김용익의원, 보건의료노조 설문조사, 응답자 70% "의료영리화 반대"(6/23)

국민 10명 중 7명이 의료영리화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실과 이목희 의원실 및 참여연대·보건의료노조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6월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영

리화정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다.

조사결과 의료영리화정책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9.7%가 반대한다고 답했으며, 찬성을 선택한 국민은 23.1%,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7.2%였다.

또한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에 대해서는 68.6%가 반대했고, '수익목적의 부대사업 추가 허용'에는 66.6%가 찬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에 반대하는 응답자들은 “병원의 영리 추구가 심해지고 병원비가 오를 수 있다”며 의료비 상승 우려감을 나타냈다.

병원에 호텔, 목욕탕 등의 부대사업을 허용한 정책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병원이 의료본업에 충실하되 환자를 대상으로 수익을 추구할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정부가 이 같은 정책들을 의료법 개정이 아닌 가이드라인 및 시행령 제정을 통해 추진하려고 한다는 점에 응답자 74.1%가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sup>17)</sup>

## 2. 하반기 복지위 20명으로 출범...여야 간사의원 교체(6/24)

후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구성이 마무리됐다. 정원 21명 중 1명이 부족한 20명이다. 보건의료인 출신은 의사 3명, 치과의사 1명, 간호사 1명, 약사 1명 등 6명이 포함돼 있다.

여야는 23일 이 같이 하반기 보건복지위 위원 구성을 완료했다.

먼저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춘진 의원이 확정됐다. 김춘진 위원장은 치과의사 출신의 3선 의원이다. 17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

여야 간사는 모두 교체됐다. 여당은 재선의원인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 야당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 초선 김성주 의원이 선임됐다.

복지위원들은 새누리당은 절반이 교체됐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2명만 자리바꿈했다.

새누리당의 경우 전반기 간사였던 유재중 의원과 김희국 의원, 류지영 의원, 민현주 의원, 신의진 의원 등 5명이 다른 상임위로 자리를 옮겼다.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의원직을 사퇴한 정몽준 전 의원까지 포함하면 6명이 복지위를 떠났다. 이 자리는 간사인 이명수 의원과 함께 김재원 의원, 김기선 의원, 박윤옥 의원, 이종진 의원 등 5명이 채웠다. 새누리당 복지위 정원은 11명이지만 7.30 재보선을 예비해 1석은 비워두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오제세 위원장과 이연주 의원이 다른 상임위로 옮기고, 김춘진 위원장과 인재근 의원이 새로 들어오는 선에서 소폭 교체됐다. 인재근 의원은 복지부 장관을 지냈던 고 김근태 의원의 배우자로 전반기에도 복지위를 1순위로 희망했었다.

비교섭단체 몫으로 배정된 1석도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그대로 잔류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후반기 19대 국회는 오늘(24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과 함께 본격 출범한다.<sup>18)</sup>

## 3.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문형표 장관 고발”(6/25)

시민단체가 의료민영화 중단을 촉구하며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조치 할 방침이다.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지난 24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조치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 대다수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정부 공청회나 국회 법 개정 없이 시행규칙과 가이드라인만으로 한국의료제도를 송두리째 바꿀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범국본은 “의료법상 영리추구행위를 엄격히 금지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불법적인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은 장관으로서 불법적 행위를 자행하는 ‘직권남용’이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수장으로서 그 책임을 방기하고 되려 의료공공성을 훼손하고 있는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다”라고 질타했다.<sup>19)</sup>

#### 4. OECD health data 2014 발표(7/2)

<http://www.oecd.org/els/health-systems/health-data.htm>

OECD Health Data 2014 요약표 (2012년 기준)							
분야	지표명	한국	OECD 평균	최대	최소		
건강상태	기대수명(세)	81.3	80.2	83.2	일본	74.4	멕시코
	영아사망률(출생아 천 명당, 명)	2.9	4.0	13.3	멕시코	1.1	아이슬란드
	암에 의한 사망률(인구 십만 명당, 명)	183.3	207.5	293.3	헝가리	117.1	멕시코
	뇌혈관질환에 의한 사망률(“)	76.5	68.1	136.7	슬로바키아(*10)	37.8	캐나다(*11)
	허혈성심장질환에 의한 사망률(“)	43.2	119.2	404.4	슬로바키아(*10)	39.0	일본(*11)
	호흡기질환에 의한 사망률(“)	75.3	67.5	104.9	영국(*10)	29.1	에스토니아
	자살에 의한 사망률(“)	29.1	12.1	29.1	한국	1.7	터키(*11)
	본인의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비율(%)	33.3	69.4	89.3	뉴질랜드	30.0	일본(*10)
보건의료 비용 결정요인	주류 소비량(15세 이상 인구 1인당, 리터)	9.1	9.0	12.3	에스토니아	1.6	터키
	흡연인구 비율(15세 이상 인구, %)	21.6	20.3	38.9	그리스(*10)	11.8	멕시코
	남성흡연인구 비율(15세 이상 남성, %)	37.6	24.9	43.7	그리스(*10)	12.8	스웨덴
	여성흡연인구 비율(15세 이상 여성, %)	5.8	16.0	34.0	그리스(*10)	5.8	한국
	측정된 과체중 또는 비만인구 비율(%)	31.8	56.8	71.3	멕시코	23.7	일본
보건의료 지원	총 병원병상(인구 천 명당)	10.3	4.8	13.4	일본	1.6	멕시코
	금성기의료 병원병상(인구 천 명당)	6.1	3.3	7.9	일본	1.5	멕시코
	임상외사(인구 천 명당)	2.1	3.2	4.9	오스트리아	2.1	한국
보건의료 이용	의사의 외래진료(국민 1인당)	14.3	6.9	14.3	한국	2.7	핀란드
	치과의사의 외래진료(국민 1인당)	1.8	1.2	3.2	일본(*11)	0.0	포르투갈
	환자 1인당 평균병원재원일수(일)	16.1	8.4	31.2	일본	3.9	멕시코
보건의료 비용	GDP대비 국민 의료비(%)	7.6	9.3	16.9	미국	5.4	터키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 비율(%)	54.5	72.3	85.8	네덜란드	47.6	미국
	국민의료비 중 기계적접부담 비율(%)	35.9	19.0	45.2	멕시코	6.0	네덜란드
장기요양	병원과 시설 내 장기요양병상(침상)수 (65세 인구 1,000명 당)	50.1	50.5	73.2	스웨덴	17.9	폴란드

자료 : OECD  
 뉴시스 그래픽 : 김민호 기자  
 minho@newsis.com



- 1) '경북대병원노조 '의료민영화 반대' 파업...병원은 '정상진료', 2014.6.27., <경제투데이>
- 2) '보건의료노조 의료민영화 반대 경고파업 돌입', 2014.6.24., <참세상>
- 3) '국회 입법조사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 위법"', 2014.7.2., <경향신문>
- 4) '병원계 하루 돌입...이달 22일 '2차 총파업'', 2014.7.2., <데일리메디>
- 5) '원격의료 11월·부대사업 8월, 로드맵 확정', 2014.7.3., <데일리메디>
- 6) '국회 "의료영리화·요양병원 질관리" 십자포화', 2014.7.3., <메디파나뉴스>
- 7) '野, '영리자회사 설립금지법' 잇따라 제출', 2014.6.26., <메디파나뉴스>
- 8) '정부, 지방의료원 '건강한 적자'는 지원 확대', 2014.7.3.,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9) '건보공단, 100만명 건강정보 빅데이터 학술연구용으로 제공', 2014.6.23., <라포르시안>
- 10) '경제계 또 영리병원 허용 주장...“일자리창출 위해 필요”', 2014.6.25., <라포르시안>
- 11) '이대목동병원, 4개월간 엑스레이 좌우 바뀐 줄 모른 채 수백명 처방', 2014.6.30., <조선일보>
- 12) '서울대병원, '헬스커넥트' 위법성 논란 도마위', 2014.7.2., <메디컬투데이>
- 13) '약사가 복약지도 안하고 약 팔면 과태료 30만원', 2014.7.1., <매일경제>
- 14) '상급병실료 보전책, 특수병상 수가인상폭 '조율 중'', 2014.6.25., <메디파나뉴스>
- 15) '의·병협 회장 첫 상견례, 의료제도 개선 노력 약속', 2014.6.29., <데일리팜>
- 16) '의협, 비대위 중심으로 원격진료·영리자회사 저지 본격화', 2014.6.30., <라포르시안>
- 17) '응답자 70% "의료영리화 반대"', 2014.6.23., <데일리메디>
- 18) '후반기 복지위 20명으로 출범...여야 간사의원 교체', 2014.6.24., <데일리팜>
- 19) '의료 민영화 저지...시민단체 “문형표 장관 고발”', 2014.6.25., <메디컬투데이>